

정보통신시장 개방과 DB산업

조동성 /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이사

1. 정보통신시장 개방

1989년 2월 22일, 미국은 '88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일부인 '88 통신무역법(The Telecommunication Trade Act of 1988 ; '88 종합무역법 제1371조부터 제1382조까지의 13개조)에 의거하여 한국과 EC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한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정보통신서비스(VAS) 제공을 위한 시장접근장벽, 정부구매관행, 투자제한 조치, 표준제정과정, 통신장비 수입관세 등이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1989년 9월부터 1992년 2월 사이 총 14차의 협상을 거쳐 1992년 2월 한·미 통신협정이 체결되었다.

미국측은 협상에 있어 VAS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데 관계되는 8가지 항목과 기타 3가지 항목 등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임했던 것으로 생각되나, 전화·전신·통신망 이외의 모든 통신 서비스업을 90년부터 전면개방 하라는 요구로 시작된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 같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90년 7월 통신사업 구조조정안 발표, '91년 전기통신법 전면개정, '94년 1월 이후 VAS에 대한 외국사업자의 투자제한 전면철폐 등의 조치를 취하

였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시장 개방은 '94년 1월을 기점으로 하는 VAS시장 전면 개방을 기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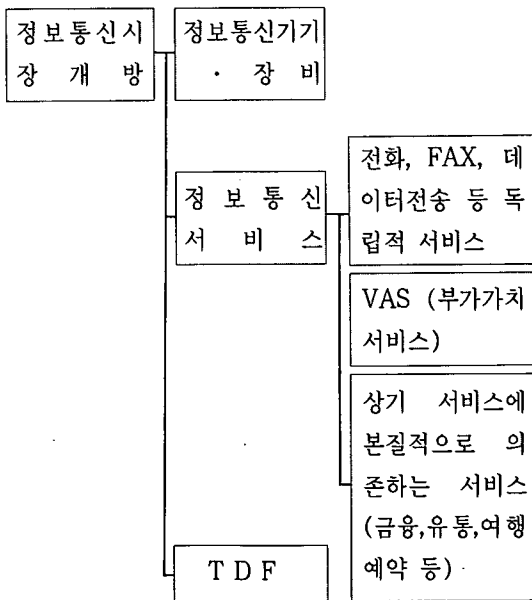
미국측의 통신협상 목표

- ① 외국의 기본통신서비스 부문에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할 것
- ② 외국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한없이 이용가능할 것
(통신망규모, 정보이동, 서비스가격 결정, 통신망관리서비스제공제한 등)
- ③ 통신망에 단말장비를 제한없이 부착할 수 있는 자유
- ④ 고유프로토콜(Proprietary Protocols)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⑤ 상호 접속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⑥ 국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⑦ 적절한 경쟁적 보완보치
(착취적 가격, 상호보호, 차별화, 상호 접속사양에 관한 기술정보 입수 제한 등)
- ⑧ 허가 및 등록 절차의 최소화
- ⑨ 표준제정과정의 명료성 확보와 이의 제기 절차
- ⑩ 내/외자 차별적 구매제도 폐지
- ⑪ 통신장비 수입관세 철폐

2. 정보통신시장 개방의 파장

정보통신시장 개방의 영향은 크게 정보통신 기기·장비 부분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보통신 기기·장비부분의 가시적 개방 결과와는 달리 '94년 1월 부터 전면 개방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분은 전화·FAX·데이터전송 등 독립적 서비스, 범용VAS·DB용VAS·업무특화 VAS 등으로 구분되는 부가가치서비스(VAS), 이들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에 본질적으로 의존하는 서비스(예 :여행예약, 금융·증권·보험, 전문 컨설팅, 신용카드, 유통 등) 등에 가시적·비가시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가간 경계없는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관계된 超國境 데이터유통(TDF : Trans Border Data Flow) 문제가 본격 대두될 것이다.

정보통신 서비스가 모든 경제행위에 중



간재 역할을 하는 기반수단(the underlying transport mode)으로 기능하게 된 요즈음에는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은 생산자·소비자가 이동없이 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거래를 가능케함으로써 정보통신업계 자체뿐 아니라 이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사업의 수행과 경쟁력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과학기술·특허·여행·신문잡지기사·기업 등에 관한 DB, 데이터의 집배신·전자우편·EDI·글로벌메시징서비스, 물류VAN·무역VAN·금융VAN·여행예약VAN 등의 제분야에서 초기단계인 우리로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융·유통 등 정보통신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개방을 앞둔 우리로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3. 정보유통의 불균형과 정보의 계열화 현상

전세계적으로 보면 정보의 유통은 매우 불균형하게 되어 있다. 북미주, 유럽, 일본 등 3개지역이 세계 50억 인구중 30%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보 보유·유통의 70%~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DB는 원본의 80% 이상이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또 정보의 전달수단은 급속하게 전자화 되어 있어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신문·잡지등 문자미디어의 성장율은 높지 않으나 TV·전화·DB등 전자미디어의 성장율은 매우 높다. 또 이들 전자미디어는 다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유리하고 이에 따라 정보자원의 편재와 정보의 불균형 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 국가내에서 중앙과

지역사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정보통신자유화는 소위 「정보의 계열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분야의 선진국인 미국은 후발국(유럽, 일본,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보를 자국의 DB에 입력시키고 후발제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미국산 DB를 이용하게 된다. 이는 과거에 천연자원 생산지역이 식량·광물·목재 등을 생산하면서도 자원을 선진국에 수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공된 제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정보통신 후발국은 자국에서 개별적으로 생산된 정보가 정보선진국으로 전달되어, 이를 이용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다시 사들여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즉 정보가 선진국의 거대 정보통신망에 흡수되어 수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분배되는 모습도 가능하게 된다. 이때 정보는 선진국의 필요에 맞는 형태로 가공되어 제공되게 된다. 이러한 것이 자본의 계열화와는 다른 정보의 계열화 현상이다.

4. 한국 DB산업의 고민

그렇다면 이러한 전세계적 『정보의 계열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DB산업의 입지는 어떠한가.

정보통신시장 개방과 관련되어 DB산업에의 영향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맞서고 있다. 낙관론자는 ①일본의 예를 들어, 한글 처리가 되지 않는 외산 DB의 국내 보급에 한계가 있다 ; ②이미 주요 외국 DB사업자는 대부분 진출해 있어(92년말 현재 외

국 35개 주요 데이터뱅크 국내 진출)개방에 따른 추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③국내 기업이 국내 기업들의 거래특성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다 등을 근거로 DB산업을 개방하더라도 20%를 약간 상회하는 선의 시장점유에 그치리라고 주장한다.

한편 비관론자는 ①품질·가격에 있어 국내 업체는 절대적으로 열등하다 ; ②국내 업체는 DB와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있어 절대적으로 열세이다 ; ③단말기와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Total 서비스체계에 있어 역부족이다 등을 이유로, 결국 우리의 DB나 DB 사업자가 외국 DB나 DB사업자에게 종속되고 말 것(정보의 계열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낙관론과 비관론은 부분적으로 근거가 있고 실제 사실인 면도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또는 대처할 것인가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한국경제는 현재 고부가가치화, 경쟁력 강화, 기술력 제고, 산업구조 개편 등을 지상과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법무, 회계, 컨설팅, 설계디자인 등 기업전문서비스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도 여기에 큰 몫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서도 기업이나 공공조직을 위한 전문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 시책, 특히 DB산업 육성책은 과연 이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는가. 우리의 과학, 기술, 문헌, 법률, 특허, 재무, 상품 DB는 어떠한가. DB 구축과 DB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의 확충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현



실적으로는 「수단」의 확충에만 급급하는 본말 전도의 모습이 아닌가.

부처간 DB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이 조율되지 않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기업·전문지향과 일반대중 지향이라는 방향성에서 갈등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미국은 DB산업 발전과정에서 DB는 전문분야 중심으로, 주체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주도권을 바꾸어 가며 추진하였고, 프랑스는 전문분야 DB 및 일반대중분야 DB를 동시에 추진하되 정부가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였다. 영·독·일 등은 모두 전문분야 DB를 중심으로 착수하되 영·독은 공공기관이, 일본은 민간기관이 주도하였다. 우리는 프랑

스 방식을 따르고 있다지만 상대적으로 전문분야 DB에의 관심·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와 같이 DB산업의 수요·공급이 모두 부족한 환경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DB산업 발전의 주요 변수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기업·전문지향 DB와 일반대중지향 DB의 갈등상태에서 추진주체, 추진범위,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국내에 기 도입된 외국산 정보의 효과적 유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도서·잡지·보고서·DB·컨설팅 기타의 형태로 많은

정보가 유입되고 있으나 그 유통현황이나 유통상의 문제점이 적시된 경우는 별로 없다. 기업·공공조직·개인의 차원에서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사장·산재·중복도입 되는 부분이 상당하리라고 추정될 뿐이다.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곳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적절한 유통경로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나은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핵심 DB분야에서는 우리의 정보는 우리가 우리의 DB로 구축하여 외국산 DB와 병용하여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외국산 DB의 도입 등에 있어 교섭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DB산업의 사업자(IP, Gateway, S/W, NSP) 입장에서는 사업자 상호간 제휴·연합, M&A 등 규모의 경제나 네트워크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보의 가공, 이용자 편의성 등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DPC)는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자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국제 정보유통

정보통신 시장개방의 영향을 논의할 때 DB분야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국제정보유통(TDF)이다. DB는 주로 기 집적된 정보의 유통이지만, 국제 VAS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유통은 국제 또는 국내 거래가 시차없이 전달된다는 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국제 교역이 실물거래에서 화폐·자본거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자본거래의 배후에 있는 TDF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90년 기준, 국

제 실무교역은 5조 달러, 화폐·자본교역은 162조 달러로서 실물교역의 32배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TDF에서도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에서뿐 아니라 DB의 양과 질에서 또 정보통신을 이용한 국제 거래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주장하고 있으나 유럽제국, 일본 등은 정보종속을 우려하여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이용한 정교한 TDF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즉 잘못된 정보가 컴퓨터에 축적되거나 축적된 정보가 악용되어 개인·조직이 뜻밖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명목으로 정보처리를 자국내로 한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도 뒤늦었지만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B]

<TDF에 대한 대책>

| 단기 대책 | 중장기 대책 |
|------------------------|-----------------------|
| TDF 실태조사 | TDF관련 모델·규칙 제정 |
| 통계자료정비 | 국산 DB의 충실화 |
| 프라이버시 보호법 검토 | |
| 국제 데이터통신시스템의 안전·신뢰성 향상 | 국제 EDI기준 제정에의 적극 참여 등 |